

농업관련 산업의 苦戰

농가 관련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다. 농업, 농기계업, 농약업등의 경영내용이 산통치 않다. 政治가 죽을썩도 경제는 팬찮다는 일반의 인식은 總量的으로 본 견해이지 산업별로 따지다 보면 虛構가 많다.

이 경우 內需 중소기업이 고전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런데 11일 발표된 농가 호당 평균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농수산부 조사결과는 또 다른 충격을 준다. 4천만 인구중 8백만명을 차지하는 농촌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경제흐름속에 부채증가비율에는 속수무책이러니.

다시 말해 86년 농가 호당 평균 소득은 5백99만5천원으로 前年比 4.5% 늘었으나 빚은 한집 평균 2백19만2천원으로 8.3%가 늘었다. 이나마 농업외 소득이 前年比 13.8%가 늘어난 덕분이며, 농업비용을 감안한 농업소득은 0.6%가 줄었다. 빚의 내용도 생산성부채는 3.9% 증가에 그친 반면 家計性부채가 12.8% 늘어 부채구조의 不實化를 심화시켰다.

이런 농가소득의 不振이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11개 농약회사 가운데 두어개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가 苦戰을 면치 못하는 실정은 오히려 농기계회사들의 대형 赤字에 가려 별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만큼 농기계회사들의 경영은 말이 아니다. 82년 이후 동결된 가격이 생산 원가에 미달인데다 외상 장사에 대리점 마진율 등이 높아져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관념이 업체마다 팽배하다는 것이다. 미수금만 2천억원 선이라니 심상치 않다.

이유는 많은 듯하나 간단하다. 이들이 농민상대로 장사를 하는 까닭이다. 소득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 부채 소유자들과 거래하며 큰 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채산은 맞아야 한다.

농가소득의 제자리걸음과 농업관련 산업들의 부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흑자경제시대에 상대적 거리감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무역흑자 축소 때문에 内需진작의 필요성을 内外로 부추 받고 있는 요즘 우리의 농업정책, 농가관련 산업 육성책은 마땅히 再考돼야 한다.

그 첫째는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판로보장이다. 그러나 각국의 농업정책, 한국에 대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등과 관련 생산성 향상쪽이 우선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농기계업체의 경영난 타개, 말하자면 판매가격보다 原價를 낮게 유도, 良質의 농기계를 무리없이 공급케 하는 방법등이다.

둘째로 농가소득 증대는 역시 농업 소득보다 農外소득을 통하는게 합리적이다. 최근 農工단지조성이 활기를 띠는 것은 나름대로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변화없이 우리가 2000년대 산업구조를 원활히 정립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땅, 인구, 자연조건등을 감안할 때 우리 농업의 적정 위치가 어디인지 판단해야 한다. 농가 소득과 부채의 상관관계, 농업관련 각종 산업의 합리화는 농업에 대한 재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6.12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설을 전재한 것입니다.